

재벌복합쇼핑몰·이몰렛 출점저지 전국비대위마포상임동 롯데 복합쇼핑몰 출점저지
 비대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청년유니온참여연대 소비자유니온 ·민변민생의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 살리기국민운동본부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경제부, 사진부, 국회 정당
발신	전국'을 살리기국민운동본부 김동규 조직국장 010-3940-2012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실장 010-2203-8293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019-279-4251 참여연대 최인숙 민생팀장 011-661-0730
제목	무너지는 지역상권 싸늘이하는 롯데 복합쇼핑몰-아몰렛 출점 중단 촉구, 신동빈 회장의 명탕 사과 반박, 롯데재벌 불매운동 경고, 재벌개혁 촉구 공동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일시	8월 12일(수) 오후 1시30, 서울역 롯데마트 정문 앞(총 11쪽)

보도자료

롯데 재벌의 파렴치한 탐욕과 독식 규탄, 골목상권 파괴하는 롯데 복합쇼핑몰 출점 즉각 중단 촉구, 롯데재벌 불매 경고 및 신동빈 회장 사과 반박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신동빈 회장, 롯데의 온갖 불법 부당 불공정행위부터 사과하고 근절 약속해야”

일시 및 장소 : 8.12(수), 오후 1시 반 서울역 롯데마트 정문 앞

○ 동네 상권 파괴하고 지역경제 싸늘이하는 롯데 복합쇼핑몰-아몰렛 출점 중단 촉구, 신동빈 회장의 명탕 사과 반박, 롯데 재벌 전국적 불매운동 경고, 획기적인 재벌개혁 촉구 공동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 일시 및 장소 : 8.12(수) 오후 1:30 서울역 롯데마트 정문 앞
 * 8.12(수) 오후 1:30 부평역 롯데마트, 롯데시네마앞, 목포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앞에서도 동시에 1인 시위 진행/8.12(수) 호남권 중소상인들, 재벌복합쇼핑몰 규탄 대거 상경집회도 진행

[진행안]

- 신동빈 회장의 8.11 사과 내용 반박 말씀
- 전국적으로 출점하고 있는 롯데 복합쇼핑몰 중단 촉구 말씀
- 롯데 등 재벌 탐욕, 재벌독식 규탄 말씀 및 불매운동 경고 말씀
-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 소비자를 존중하는 재벌 개혁 촉구 및 1인 시위 취지 말씀
- 기자회견 후 실제 1인 시위 진행(서울역 롯데마트 부근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1인 시위)

○ 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

1. 롯데그룹은 백화점과 대형마트·기업형수퍼마켓(SSM),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편의점),프리미엄아몰렛과 복합쇼핑몰 등을 두고 있는 국내 최대 유통재벌로서,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만 2013년도 한해에 최고 28조의 매출을 올린 공룡기업이다. 그리고 다른 재벌 기업과 달리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들이 영위하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 생계형 업종에 제일 많이 진출한 파렴치한 유통 재벌이기도 하다. (롯데22개, 신세계 12개, GS는 18개, 현대백화점 등은 10개 ·2012년 중소기업연구원 발표) 즉, 대형마트와 SSM의 출점으로 골목상권을 유린하다 못해 심지어는 롯데마트의 통근치킨 같은 미끼 상품으로 동네 치킨업자들의 밥그릇까지 빼앗아 버린 파렴치한 역사가 있다.

2. 무한 탐욕의 부도덕한 기업 롯데유통의 문제는 최근 복합쇼핑몰과 프리미엄아몰렛의 출점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돈만 된다면 눈바닥 한가운데든, 도심의 백화점과 쇼핑몰이 있는 중상상권이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출점부터 하는 태도로 인해 부정부패와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작년 롯데 복합쇼핑몰 동부산점 초기 개장을 위해서 지역 시의 원과 경찰관료,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사장 등에게 행한 불법적인 로비활동과 마포 상암동 DMC단지에서 두 개의 떨어진 롯데복합쇼핑몰 건물간의 구름다리 연결 및 지하통개발식의 건축개발계획에 대한 특혜의혹들이 쏟아졌고, 반경 5~10km의 의류업, 잡화점, 이미용, 음식점, 수퍼마켓, 전통시장 등 광범위한 중소상인들에게 평균적으로 46%에서, 많게는 70%이상 매출감소를 일으킨다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서는 롯데복합쇼핑몰의 출점이 강행되고 있으며, 그와 함께 '마치 지역경제가 발전된다'는 식으로 여론 왜곡과 조작까지 일삼고 있다.

3. 또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분노하듯 국내에서 팔아줬던 수많은 부(副)들이 일본롯데에게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에서는 투자에 따른 세제 감면이나 고용의질 하락에 따른 책임회피 등 면책성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파주 롯데 프리미엄아몰렛의 경우 지역에서 2012년에 약 3천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지방세로는 고작 18억 정도에 한해 매출의 1%도 채 안 되는 지방세를 납부 하였고, 이전의 롯데아몰렛은 종사자 1,434명 중 1,400명이 비정규직(비정규직 비율이 97.6%)인데 그나마 대부분이 임금체제에서 고용한 계약직과 임시직 일자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롯데 연세점, 롯데 홈쇼핑 등 역시 특혜와 큰 이윤을 보장받고 있지만 사회적 기여는 대단히 미미한 상황이다.

4. 롯데재벌 사태가 중요한 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동반성장이라는 책우는 멀리한 채 황당하고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반사회적인 경영 행태를 일삼으면서, 골목상권과 중소상인 등 서민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데도 이것이 전혀 제도적으로 타파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초대형복합쇼핑몰과 아몰렛 출점 같은 중소유통시장에 대한 롯데 재벌의 탐욕과 독식 구조가 깨지지 않고서는 600만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은 확보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지역상권 초토화는 600만 중소상공인들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시장 및 지역경

제 붕괴에 따른 고용시장 파괴와 비정규직의 양산, 중소기업 및 납품업체들의 불공정한 갑을 관계 중속 심화, 진정한 소비자들의 선택권 박탈 등 재앙에 가까운 민생경제파탄이 일어 날 수 있는 데도 정부와 국회에서 아직까지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5. 이에 전국의 600만 중소기업인, 자영업자들은 롯데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무분별한 출점을 막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8월중으로 발족하고, 전국의 시민사회, 노동·청년단체들과 더불어 지역경제와 국민경제를 지키기 위해 **롯데재벌의 복합쇼핑몰 출점저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국회와 박근혜 정부에게 부도덕한 기업 롯데의 복합쇼핑몰 및 아울렛 출점과정에서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태들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와 조사 그리고 새로운 재벌탐욕 대규모유통업에 대한 출점규제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 등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다. 또한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롯데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파멸치하고 탐욕적인 행태에 분노하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소비단체들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롯데재벌 제품 불매를 경고하고(재벌개혁을 촉구하던 실제 전국적 공동행동 전개), 또 롯데재벌의 탐욕과 독식 퇴출 운동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같이 연대해 나갈 것이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 별첨 1 : 롯데 신동빈 회장의 사과에 대한 경제민주화 운동 단체들과 시민사회의 반박 (8.11일 참여연대 성명 참조)

**롯데 신동빈 회장의 사과는 ‘반의 반’쪽짜리로 매우 미흡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넘어 재벌 탐욕과 독식구조 개선에 대해 얘기했어야**

1. 신동빈 롯데 회장이 최근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8.11일 오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신 회장은 핵심기업 공개를 추진하고,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발표는 재벌,대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불건적이고 음습한 경영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반감이 광범위하게 표출된 것에 대한 화답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지배,운영구조 개선을 넘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병폐인 재벌 탐욕과 독식구조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는 사실상 외면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오늘 발표된 신 회장의 사과내용에는 작금 롯데그룹의 누적된 불법,부당,불공정 행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조차 없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이런 점을 줄기차게 지적해나갈 계획이지만, 그나마 신 회장이 개선을 약속했던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꼼꼼히 지켜볼 것이다.

2. 이번 롯데 사태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재벌,대기업들의 심히 왜곡된 소유,지배 구조의 문제점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사과문의 내용을 보면 지배구조 개선과 순환출자 해소 노력 등

이 포함되어 있어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왜곡된 소유,지배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발표 내용 중에 ‘지배구조 개혁으로 인해 대규모의 재원이 필요하고 신규채용 같은 투자활동이 위축된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 사과문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롯데가 “소나기만 피한 후, 국민적 기대를 또 한 번 배신하는 그런 경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3. 또 위에서도 일부 언급했듯이 이번 사과 내용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그동안 롯데그룹과 관련된 노동자 해고와 부당처우, 간접고용,비정규직 남발, 임점업체,납품업체 수탈, 임차상인,편의점,8가맹점에 대한 슈퍼 감질, 중소기업인 및 지역상권 침탈, 청년고용 확대 등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의지와 방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 국민들이 롯데그룹에 분노하는 것은 불투명한 지배구조, 가족 간의 패륜적 분쟁 때문만이 아니다. 그동안 롯데가 롯데그룹의 성장의 동력이었던 노동자, 협력업체,중소기업, 시민,소비자 집단 모두에게 무수히 많은 감질과 불법,부당,불공정 행위를 저질러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도, 개선도 없다면 우리 국민들의 롯데그룹의 사과를 받아줄 이유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4. 우리 국민들은 지금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 문제의 해결만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더욱 중요하게는 재벌,대기업들이 대부분의 경제적 이익을 사실상 독점,전유하고, 나머지 국민경제의 제 주체들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이 경제시스템의 개혁, 즉 재벌 개혁을 통한 민생경제 살리기, 경제민주화를 통한 제 경제주체들의 상생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재벌,대기업뿐만 아니라 그들과 관련된 다종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한국 경제와 우리 국민들에게는 사활적 과제인 것이다. 롯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비정규직 문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처우 문제, 청년고용 확대 문제, 협력업체,중소기업에 대한 횡포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더불어 대형마트,SSM도 모자라 전국 곳곳에서 복합쇼핑몰,아울렛까지 출점시켜나가면서 지역 상권을 고사시키는 등의 반사회적 경영행태에 몰두하고 있다. 롯데그룹의 사과가 진정성을 획득하려면, 이러한 백화점식 감질과 탐욕,독식 구조를 반성하고 개선하는 데에까지 나아갔어야 했다는 얘기가 다.

5. 그래서 오늘 신 회장의 사과는 롯데 사태의 끝이 아니라, 롯데그룹 문제 해결의 시작이어야 하고, 재벌 개혁의 시작이어야 한다. 롯데 사태는 재벌,대기업 전반의 문제들과 맥이 닿아 있고,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공약했을 것이지만, 지금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의 합리적 운영과 관련해서 전자,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의우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주주 다중대표소송 등의 제도 도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롯데그룹을 포함한 재벌대기업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의 통과와 재벌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함과 동시에, “재벌 탐욕과 독식 구조”를 “우리 국민들 모두의 상생과 제 경제주체들의 동반성장 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를 위해 재벌,대기업들의 노

동자, 중소기업, 중소기업인 청년, 소비자들에 대한 불법, 부당, 불공정 행위부터 근절,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고, 지금의 한국 경제야말로 경제민주화가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 끝.

※ 별첨 2 : 전국의 재벌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출점 현황과 문제점(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종주 정책실장 경리)

1. 출점현황

- 2013년 기준으로 82개, 18년까지 26곳 추가 출점 예정¹⁾
- 서울의 경우 백화점 및 복합쇼핑몰(아울렛포함)의 점포당 인구수 16만9천명²⁾
- 13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백화점, 아울렛을 포함한 복합쇼핑몰의 출점 적정 수는 거의 임계치에 도달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음

표 6. 점포당 고객 인구수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 (단위: 개, 천명)

	서울	인천	대전	경기	충주	충남	충북	제주	전북	전남	영북	영남	대구	울산	부산
대형마트	70	28	16	315	12	22	13	6	18	15	24	29	14	21	11
백화점	31	3	5	18	3	2	2	-	2	1	2	5	2	10	3
복합쇼핑몰 및 아울렛	28	6	1	28	4	1	1	-	1	1	-	2	-	2	3
인구수	9,961	2,814	1,546	12,060	1,518	2,147	1,561	500	1,869	1,762	2,642	3,263	1,504	2,471	1,120
대형마트 점포당 인구수	143	103	97	305	127	98	120	93	100	117	110	113	107	118	102
백화점 점포당 인구수	322	939	309	671	506	1,074	781	-	902	1,762	1,321	613	752	147	373
복합쇼핑몰 및 아울렛 점포당 인구수	357	469	1,546	481	380	2,147	1,561	-	1,863	1,762	-	1,612	-	1,206	373
백화점 및 복합쇼핑몰 점포당 인구수	169	313	251	263	217	716	320	-	601	861	1,321	466	752	206	187

자료: 한국레스토랑이협회, 통계청, 한국증권 리서치센터

- 미국 등 해외사례와의 비교
미국은 이미 80~90년대 (1500여개 출점) 포화상태에 달하면서 중규모 업체 출점과 데넨트릭스 등 매장리뉴얼로 선회
일본도 12년 기준으로 매장면적 5,000 ㎡이상 되는 쇼핑센터가 3,096개 정도로 전체 소매업 매출의 20% 정도 차지함³⁾
- 주변부 교외지역으로의 상권이동에 따른 중심시가지 공동화 확산
미국이나 일본 등 초대형 복합쇼핑몰의 교외지역 진출은 중심시가지의 교통 및 주차난, 도심 자가 상승, 주변 대형유통업체를 포함한 상권의 과밀화 등의 영향을 받아 출점이 제한되면서 인근 혹은 교외 지역으로 출점이 이동하게 되면서 중심시가지의 대규모 공

1) 한국증권리서치 2014년 4월
2) 삼성경제연구소 등 대형마트 관련 적정인구수 15만 명 당 1개
3) 일본은 74년 대규모소매점포법(대점법)으로 인해 지역상점을 보호하는 조치로 인해 쇼핑센터 개발이 제한되고 매장면적, 마케팅활동 등이 제약을 받게 됨 또한 90년 경기침체 이후 대점법 규제완화 이후 쇼핑센터 출점이 증가함 특히 92년 대점법개정과 2000년 대점일지법 제정으로 교외에서 대규모 쇼핑센터 출점이 크게 증가 함

동화를 초래함

이에 대해 일본은 다시금 도심 중심시가지활성화법(2006년) 도시계획법(2008년) 시행 으 로 대규모쇼핑센터 개발을 제한 하게 됨
예를 들면, 쇼핑센터(연면적 1만㎡ 이상)는 6개 용도지역 중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상업지역에서만 출점이 가능하게 됨 특히, 토지이용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백색구역 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금지

2. 복합쇼핑몰의 상권 영향 평가 결과 비교

- 산업부의 상권영향평가 기술서 지침 (13년 유통법 개정사항)
 - 상권영향평가의 기술 주제를 대형유통업체가 하도록 되었음
 - 반경 3KM로 한정해서 평가
 - 대형유통업자의 사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을 금지함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제5조제2항 관련)

항 목	작성 기준 및 방법
1. 요약문	
2. 사업의 개요 가. 개설자 나. 개설지역 다. 추진일정 및 영업개시 예정일 라.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마. 매장면적(㎡)	· 라목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구분하고, 대규모점포인 경우 법 별표의 대규모점포의 종류 6 가지(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중에서 선택
3. 상권영향 분석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나. 위치도 또는 지형도	· 가목의 공간적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함 - 대규모점포의 경우 개설지역의 반경 3km - 매장면적 330㎡ 이상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개설지역의 반경 500m - 매장면적 330㎡ 미만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개설지역의 반경 300m · 나목의 지도에 개설예정지와 상권영향분석의 공간적 범위를 표시

[표 15] 지역협력계획서 항목 및 작성방법

2. 지역협력 계획서	가. 추진배경 나. 추진전략 다. 주요내용 라. 추진계획 마. 기대효과	·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지역 상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력계획을 수립하며, 공정한 경쟁 및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업,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사업, 소비자 선택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소비자 후생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업 등을 포함해서는 안 됨
-------------	---	---

- 수원역 롯데복합물과 잠실의 제2롯데복합물 사례
- 수원과 잠실의 경우 복합쇼핑몰의 입점 시설 중 백화점 혹은 대형마트를 기준으로 인근 1KM내의 전통시장에 대한 상권영향평가 작성으로 편법을 부림
-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허가 심의 이후의 대규모점포 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서 제출의 문 제점 (20~30일 정도 자치단체에서 심의)

3. 정부 및 지자체의 투자유치와 특혜

- 14~18년 유통산업발전 5개년 계획/13년 대통령자문기구 국민경제자문위원회

구분	주요 내용
규제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업태 분류 체계 현실화 ■ 외국계 유통업체 등 규제 의 사각지대 해소 및 대형마트 입점업체 등 선의의 피해 완화 ■ 점포등록 후, 건축허가 이행 등 점포 개설절차 개선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물류 전문기업 육성 ■ 상권특화지구 지정 ■ 드럭스토어, 복합쇼핑몰 등 신산업 육성
유통산업 발전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산업연합회 및 유통산업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 ■ 유통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강화 ■ 유통산업 공제조합 설립

- 경기도내의 신세계와 롯데의 프리미엄아울렛 유치과정에서의 온갖 특혜 설
- 물류단지에서 재벌유통업체들의 쇼핑단지로 변질
- 여주 프리미엄아울렛은 물류단지로 지정되면서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중합토지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음. 특히 신세계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의 경우 용복 4차선의 진입도로 개설에만 국,도, 군비 266억을 투입한 반면에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이 년 총 지방세는 52억에 불과 (도로개설 예산의 23%)
- 신세계에서는 안성시 공도읍일대에 복합쇼핑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시공사의 지원을 받아 물류단지 개발 사업이라는 '공익사업'으로 포장돼 주변 토지를 '수용' 할 수 있게 됨
- 전남 LF (구 LG 패션) 아울렛 유치과정에서의 준주거지역으로 토지용도변경 통한 토지 강제수용 등 행정특혜 의혹 제기

-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이용한 사례

- 7 -

- 우선 사업자로 지정, 사업부지를 '수의계약'해서 논란이 된 경기도 하남의 신세계 하남 유니온스퀘어(신세계그룹이 미국의 글로벌 쇼핑몰 개발·운영기업인 터브먼과 합작), 고양시 킨텍스 지원시설부지에 들어선 원마운트(일본계기업과 합작)는 공시지가의 1%만을 부지임대료로 납부하는 조건에 임대기간을 35년에서 추가로 15년 연장까지 총 50년 계약 4)

-세금으로 재벌유통업체 부담지원

- 12년 기준 여주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은 3천억원과 파주 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은 2천 500억원의 매출은 올린반면에 지방세는 여주 프리미엄아울렛이 13억 8천만원,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이 8억8천만원을 냈고, 롯데 프리미엄아울렛도 3천억원의 매출을 올린 반면에 18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하는 등 매출액 대비 1~2% 수준

- 일방적인 재벌유통업체 사업보고서 반영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빛 좋은 개살구"

- 이런 롯데는 비정규직 비율이 97.6%. 종사자 1,434명 중 1,400명이 비정규직 그나마 대부분이 개별 브랜드 매장에서 직접 고용한 계약직과 임시직 일자리
- 롯데, 여주 첼시 2개 아울렛의 사무직 종사 정규직은 전체 2300여명의 일자리 중 44명(1.9%)에 불과함
- 신세계 사이먼축이 여주 프리미엄아울렛을 개장하면서 3천5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홍보했지만, 실제 지역 주민 고용창출은 1250명으로 절반 수준

4.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 독일식 상권영향평가제도 마련
- 독일은 일정한 존(ZONE)에서만 출점 가능 그리고 반드시 주변상권영향평가를 통과해야만 함 (10% 매출 감소 시 불허)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 위헌인가?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프레시안 기고글 12.06.28>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서유럽 국가들은 도시계획과 생활환경 보호의 측면에서 주거 지역 등 일정한 용도지역에 대하여는 대형마트의 진출을 규제하고 있다. 전통시장으로부터 1km 반경의 존(zone) 범위 내에서만 진출을 규제하는 우리와 정반대로 독일은 일정한 존(zone) 범위 내에서만 진출이 허용되는 방식이다.
 독일은 우리나라의 '신도시'와 같이 인구가 급증한 지역 또는 기존 시장상권권역으로 해당 지역주민의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지역을 '특별지구'로 지정한다. 매장면적 1200㎡ 이상의 대규모 소매점은 연방 건설법과 건축이용시행령에 따라 이러한 특별지구 내에서만 개설이 가능하도록 규제하

- 4) 국내 기업들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국유재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도시개발법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등 이중상충 적용받아야 하는 현실은 외투기업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오히려 수의계약에 원형지 공급등 이중혜택 제공 (경인일보 13년 4월 12일 복합쇼핑몰에 묵묵히 지켜봐 주시기)

- 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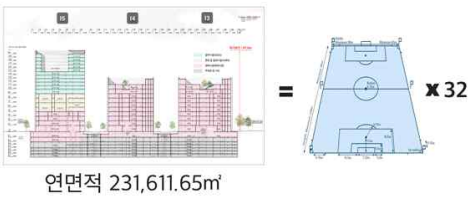
고 있다. 그 결과 주거지역과 촌락지구, 혼합지구, 산업지구, 공업지구 등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대형마트가 특별지구 안에서 출점 한다 해도 '10% 가이드라인' 규제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즉, 사전 조사를 통해 대형마트의 개설이 기존 소규모상인들의 매출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객관적인 수치로 평가한 후 예상되는 대형마트의 개설로 인하여 주변 소규모 상인들의 매출액이 기존보다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대형마트 출점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독일 함부르크 시내 베아게도르프 중심 상가에 독일의 대형유통업체인 메트로(Metro)가 진출을 시도했다가 3개월이 넘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메트로가 진출할 경우 주변 상인들의 기존 매출액이 20%가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진출이 백지화된 사례가 있다. '10% 가이드라인'을 통과했어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기존상권영향평가 등 엄격한 기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나아가 지방정부는 대형마트의 입점을 허가하기 전에 대형마트의 진출 계획을 지역신문 등을 통해 반드시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가 존재한다.

- 지속적인 상권영향평가 실시와 지역협력사항을 검토해서 등록취소 여부도 검토
- 중소상인 시민사회 정당들이 함께하는 재벌복합쇼핑몰 공동대응기구를 통한 여론전
 - 재벌복합쇼핑몰 출점저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결성 (15년3월)

상암동 DMC 롯데복합쇼핑몰 무엇이 문제인가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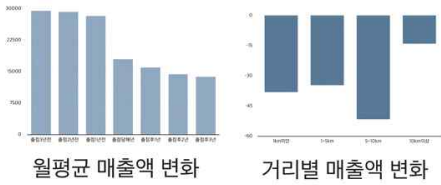


전국현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구 결과

조사대상 영등포타임스퀘어, 파주 신세계아울렛,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등 3곳 조사지역 상기 대형유통업체 주변의 소매점포 314곳



마포구 대규모점포 개입에 따른 상권영향평가



“마포구의 경우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광범위한 소매업종에 대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 범위가 반경 5km까지 확산될 것**이며 예상 매출 피해액도 평균 30% 감소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업허가 및 허가조건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함.”